

민노총, 전국서 파업... "탄력근로제 확대하면 기계 멈춰"

국회 앞 총파업 집회에 1만명 집결 "文정부 정책,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사회대개혁 투쟁의 선봉 나설 것"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이 2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전국 14곳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수도권 결의대회에는 추최 측 추산 1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반기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상인입법위를 확대 개악하고 대통령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

을 했다"며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 과제,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고 있는 노동공약, 강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을 바로잡고 탄력근로제를 폐지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나왔다가 8월 이후 노사정대표자회의 의제별 위원회 등에 적극 참가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병행했다"며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만행이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란 초과근무 등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면서 평균 법정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개혁정부가 아니라 개악정부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노총 공격에 더 노골적으로 가세하며 이 기회

에 박근혜 노동개악을 전면적으로 하지며 문재인정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적폐청산과 재벌체제 철폐를 위해 농민, 청년 등 이땅의 민중과 연대할 것이며 12월1일 전국민중대회 총력 집결을 비롯해 사회대개혁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표류하고 문재인정부의 개혁에 빨간불이 켜진 지금,

이 빈틈을 다시 재벌과 적폐관료들의 동맹이 메우려 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간 단축을 없던 일로 돌리려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노동계를 겁박하고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계를 멈추고 일손을 멈춰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 국회 앞 100m 지점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8개 중대를 배치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사랑의 연탄나눔 이웃에게 후끈한 사랑 펼쳐

전북농협 노동조합(위원장 박병철)은 지난 20일 인후동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전북농협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준비했으며 연탄나눔을 통해 연탄 2천여장을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이웃들, 농협 임직원들은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연탄을 쌓으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

박병철 전북농협 노동조합위원장은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을 더 안아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전북농협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 노동조합은 매년 겨울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 연탄나눔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재직셋팅·사업자등록' 미끼 불법 '인터넷 사채업자' 주의보

불법 대출시 금감원 분쟁조정 못받아... 범죄가담으로 형사처벌

최근 '재직셋팅', '사업자등록' 등을 미끼로 고액의 불법대출을 권하는 인터넷 대출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무직자나 대학생, 주부 등의 경우 고금리·불법추심의 늪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시간감시단이 지난 2~10월 중 제보한 인터넷기체와 블로그 불법 대출광고 게시물 1만997건을 심사해 총 501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인터넷 불법대출광고의 주요 수법 중 하나는 '재직셋팅'이다. 소득이 없어 대출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치 직장에 다니는양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조작해 대출해줄 수 있다며 미끼를 던진다. 그러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왕이면 고액을 대출받을 것을 종용하는 식이다.

또 다른 수법은 '사업자등록'이다. 금전이 필요하다는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꼬드긴다. 이후 폐업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며 대신 최소 3000만원 이상부터 대출받을 것을 강요하는 식이다. 최근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터넷 불법대출 광고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

'누구나 대출가능', '급전 당일대출'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대출광고시 명칭이나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를 게재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과도한 채무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게재도 의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명이나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며 "이를 이용하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감압적인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는다. 향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 폐업한 기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한 허위광고도 만연하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받기 전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확인은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가능하다. 대출상당사나 대출모집업 등록여부는 각 금융업협회 공공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포털(www.loanconsultant.or.kr)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이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면 피해는 물론 오히려 형사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대출받은 사람도 다양한 공익 가치 창출을 위해 21일 무주군 안성면 외담마을에서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황인홍 무주군수, 유송열



전북농협이 21일 무주군 안성면 외담마을에서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행사를 했다.

'테마가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무주군 안성면 마을주민 100여명 참석... 도자기 벽화와 꽃길 조성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무주군 안성면 부녀회와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 농촌의 다양한 공익 가치 창출을 위해 21일 무주군 안성면 외담마을에서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황인홍 무주군수, 유송열

무주군의회위원장, 송혁 무주군지부장, 곽동열 무주농협조합장, 이순희 무주군새마을부녀회장, 안성면 부녀회와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 농촌의 다양한 공익 가치 창출을 위해 21일 무주군 안성면 외담마을에서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담마을 주민들의 행복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을 주민들의 얼굴을 캐리커처한 도자기 벽화와 꽃길을 조성했다.

더불어, 농촌 어르신 대상으로

전북이미용봉사단(단장 박보라)의 미용 재능 나눔 봉사도 함께 진행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환경, 경관'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 농촌이 농업인에게 깨끗한 정주공간, 생산공간, 도민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